

감사결과

1. 총괄

이번 감사는 본청과 소속기관과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지시사항 관리를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 및 주요 추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처리 방안 마련 등 [표 1]과 같이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·권고하였다.

[표 1] 감사결과 현황

(단위: 건)

합계			변상명령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	기관 경고	기관 주의	경고 (인원)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					기타
건수	금액 (원)	인원										계	일반	시정 완료 (금액)	인사 자료 (인원)	비위 (인원)	모범	
9						1				5	3							

2. 지적사항 주요 내용

①-1 체계적인 지시사항 관리를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(개선)

- (판단기준)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 따라 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거나 분장하기 위해 소속기관을 두고 있고,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사무(위임사무)를 수행하며 특히, 각 기관의 기획부서는 기관장의 지시사항 관련 추진실적 관리 업무 등을 담당토록 정함

○ (문제점)

➡ 기관장 지시사항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기관별로 다를 경우 기관장의 지시사항이 소속기관의 현장부서까지 효과적으로 전파·이행되지 못할 우려

가. 기관장 지시사항 관리 여부 및 전파 체계 미흡

- 총 28개의 소속기관 중 8개의 기관만이 기획부서에서 소속기관장의 지시사항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실정
- 기획재정담당관실은 본청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취합받아 청장 지시사항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으로는 전파·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
- 소속기관장의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지방청 또한 현황 관리 자료를 지방청 각 부서로 전달·공유하나 소속 해경서로 전파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

나. 소속기관장 지시사항 관리 근거의 통일성 필요

- 각 지방청별로 지시사항 관리 근거에 관한 자체 사무분장 규칙 및 위임전결규칙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

조치할 사항

- 중부·서해·남해·동해·제주지방청장(기획운영과장)에게 소속기관장의 지시사항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(사무분장 규칙, 위임전결 규칙)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‘개선’ 요구

①-2 정비창의 수의 계약 개선 관련 청장 지시사항 등 이행 부적정 (기관경고)

- (판단기준) 정비창은 종합감사 처분(2020. 6월)과 종합발전 보고회(2020. 9월) 결과에 따라 물품구매 관련 수의계약 최소화 등의 자체 개선조치계획 수립
- (문 제 점)
 - 연도별 계약현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 확인 결과 ‘20년 개선조치계획 수립 이후에도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2천만 원 미만 계약(83억^{20년}→99억^{21년})과 건당 5백만 원 미만의 관서운영경비(시설장비유지비, 재료비) 집행은 오히려 증가

- 종합발전 보고회 시 언급된 청장 지시사항을 위해 정비창 기획운영과 주관
총액·수의계약 → 단가계약 방식의 추진 계획¹⁾을 수립하였으나 결재 과정에서
당시 정비창장은 ‘자재 단가계약 체결 재검토’를 수기로 적시하여 최종 결재
- 정비창 기획운영과는 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소속기관장의
다른 의견이 있었음에도 재검토 사항에 대한 보고 및 계획수립 등의
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으며
- 그 결과 계획했던 단가계약 방식의 계약은 추진되지 않은 채 유사사례 반복 등
기존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,
- 현 정비창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계받지 못해 청장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
업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확인됨

조치할 사항

- 정비창장에 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과 청장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
업무를 충실히 수행되지 않는 점을 들어 ‘기관경고’

② 주요 추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처리 방안 마련 필요(권고)

- (판단기준) 행정기관은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라
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하거나 필요한 경우 행정조직상의
계통에 따라 발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필요시 인정되는 문서 발신에 관한
내용을 규정하고 있음
- (문 제 점)

→ 문서를 통한 전달체계가 일관되지 않을 경우 본청의 주요정책사항이
일선 현장부서까지 명확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 상존

1) 정비창 기획운영과-256(2021. 1. 12.)호 ‘21년 고빈도 수리자재 및 수리용역 단가계약 추진 계획’

- 본청에서 매년 수립·하달되는 동일한 성격의 주요 정책관련 문서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등에 따라 수신처가 매년 다르게 지정되는 사례 다수
-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하달한 문서의 본문에는 지방청장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·시행 요구하였으나 붙임문서는 해경서장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사례
-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해경서의 연간 주요업무 계획 문서가 해경서별로 매년 수신처가 다르게 지정·보고하는 사례 다수
- 본청에서 하달된 주요 문서를 지방청에서 서로 다르게 처리하는 사례 다수

※ ▷▷청의 경우 본청의 지시 등 하달 문서는 지방청에만 하달, 지방청은 경찰서로 전파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, ㉠㉠부의 경우 「㉠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」을 자체 제정, ㉠㉠부 → 각급기관 → 예하부서를 거치는 문서전달체계 유지

조치할 사항

- 기획조정관(혁신행정법무담당관)에게 주요 정책들이 소속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되고, 일관성 및 통일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 전달체계 자체기준 등을 마련토록 ‘권고’

③ 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(권고)

- (판단기준) 우리청은 '04년부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·운영중이며, 특히 대외로 공표되는 통계의 경우 「통계법」 제2조에 따라 정확성·시의성·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·관리되어야 함
- (문 제 점)

➡ 외부로 공개되는 업무 실적 등에 대한 통계 수치가 부정확할 경우 우리청이 집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왜곡 등 대외신뢰도 하락 우려

가. 대외 공표 통계 부정확 등 관리 부적정

- 대외로 공표되는 e-나라지표 가운데 입력 오기, 소수점 미반영, 입력 누락 등의 사유로 일부 지표의 경우 내부 관리통계와 불일치 확인
-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표되는 지표 가운데 ‘음주운행 통계 현황’ 통계의 경우 담당자 입력 오기로 인해 내부 관리통계와 불일치 확인

나. 통계관리규정 및 작성지침 부재에 따른 생산 및 관리체계 미흡

- 대외로 공표되는 e-나라지표(6개) 가운데 2개(①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황, ②밀입국자, 밀출국자 단속현황) 통계는 별도 작성지침이 없고,

▶ 작성 지침 보유: ①해상조난사고 현황<해상조난사고 통계관리 시스템 운용 표준가이드 라인> ②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<해양환경위해사고 통계 작성 가이드> ③마약·밀수사범 단속 현황<마약류범죄 정보전산 입력 매뉴얼(경찰청)> ④해상범죄 발생현황<형사사법정보 시스템 매뉴얼, 경찰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규칙>

- 총괄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규정이 부재한 실정이고, 개별 지침에 관리중인 통계의 경우에도 용어 정의가 상이하여 통계 오류 우려

조치할 사항

- 기획조정관(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)에게 대외 공표되는 통계의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오류 사항을 수정토록 하고, 생산되는 통계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‘권고’

④ 파·출장소 지도점검에 따른 동일 지적사례 반복 개선 필요(권고)

- (판단기준) 「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」에 따라 해경서장은 파·출장소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고, 분기별로 지도방문하여 근무실태 점검 및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·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(문 제 점)

➡ 지도점검 결과문서의 전달 체계가 해경서별로 상이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발굴한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, 유사·동일 사례가 반복 지적됨에 따라 지도점검이 일부 형식적으로 수행될 우려

- 최근 2년간 해경서 주관 파·출장소 지도점검 현황²⁾을 확인해 본 바
- 지도점검 결과문서 전달을 해경서별로 다르게 처리하는 사례 다수
- 지도점검 결과문서를 생성하지 않거나 파·출장소 점검일이 결과보고서에 특정되지 않아 실제 점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사례
- 동일한 해경서에서 분기별 지도점검 시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사례가 다음 지도점검에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
-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수행한 소속서 대상 자체감사에서도 파·출장소 관련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례 감사 처분 반복

조치할 사항

- 구조안전국장(해양안전과장)에게 파출소 및 출장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효성 있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,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‘권고’

2) 2021. 1분기 ~ 2022. 3분기까지 실적 기준 해경서에서 제출한 지도점검 증빙 자료와 문서등록대장을 바탕으로 확인